관훈토론회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일시: 2021년 3월 31일(수) 10:0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연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회



홍지영
(관훈클럽 감사,
SBS 편집부 선임기자)

토론



구혜영
(관훈클럽 기획담당
운영위원, 경향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김대영
(관훈클럽 회계담당
운영위원,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김홍수
(관훈클럽 편집위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희원
(관훈클럽 서기담당
운영위원,
한국일보 논설위원)

“주택공급 확대 위해 용적률·높이 규제 풀 것”

홍지영(사회, SBS 편집부 선임기자): 관훈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견 언론인들의 연구모임인 관훈클럽은 3월 1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모셨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33~34대 서울특별시장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민 모두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패널들의 질문도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소 불편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방청석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사무국 직원을 통해 전달해주시면 잘 반영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수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 옆에는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선임기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제일 끝에는 김대영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입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SBS



관훈클럽은 2021년 3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초청해 관훈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홍수 조선일보 논설위원,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오세훈 후보, 홍지영 SBS 편집부 선임기자(사회),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 김대영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편집부 선임기자 홍지영입니다.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 먼저 듣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마스크를 벗고 토론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기조연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안녕하십니까.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관훈클럽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홍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언론계 원로분들을 비롯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 참으로 영광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 2.8%에 많이 못 미칩니다. 글로벌 도시지수(Global City Index),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도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제 임기 5년 동안 올려놓았던 것이 모두

제자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위기를 맞고 있고 서울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당선 즉시 시정(市政)을 안정궤도에 올리고, 시민의 안정과 일상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물망 복지', 제 임기 중에 했던 그물망 복지 시즌 2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거, 일자리, 건강, 소득에서 안정을 찾아드리고 여성,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과 청년, 저소득층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2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 원까지 1년 동안 4무(四無), 이자와 보증료 이런 것들이 없는 '사무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았던 여성행복 프로젝트, 일명 '여행(女幸) 프로젝트'의 시즌 2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치매와 건강검진의 품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 근무시간의 절반을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만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머리로 일했다면 이번에는 가슴으로 일하겠습니다. 안심시켜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서울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담대한 상상력과 과감한 행동으로 변화의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교통·주거·주택·행정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내 집 앞 공원, 지상철 지하화를 통해 '15분 슬세권'(슬세권=슬리퍼+勢圈, 슬리퍼를 신고 편한 복장으로 각종 여가·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권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서울의 마지막 기회의 땅 용산을 '대한민국의 라데팡스'(La Défense, 프랑스 파리 서북쪽 외곽에 있는 파리 광역도시권 최대의 상업지구)로 만들겠습니다. 강북 전체를 변화시킬 100만 평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3대 서울경제 축을 완성해 2025년 서울경제 500조 시대를 열겠습니다. 창업에서 기업 성장까지 서울의 창업환

경을 싹 바꾸겠습니다. 서울의 행정도 완전히 혁신하겠습니다. 서울의 유니콘 기업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시즌 2도 기대해주십시오.

빠르게 공급하고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36만 호 신규 주택공급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상생주택 7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모아주택 3만 호,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기존 공급계획 7만 5,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 중에 1인 가구 비중이 34%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를 보호하는 안심특별대책본부를 발족시키겠습니다.

'이제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 이런 평가를 제 임기 마지막 즈음에 들었습니다. 이 가슴 벅찬 평가가 반드시 다시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을 도시경쟁력 세계 1위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기의 서울, 활력을 잃어가는 서울, 지난 10년 서울을 이끈 세력이 누구입니까? 국민께 고통만 주는 세력,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서울을 다시 뛰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열정'과 '의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사회: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 후보님, 어젯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지요? 방송토론회 이틀 이어졌는데 잘 봤습니다. 두 후보 토론이 날이 갈수록 점점 치열해지는 느낌인데요. 어제도 역시 내곡동 땅 문제가 토론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박영선 후보가 제시한 내곡동 땅 지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문제가 된 땅이 이명박 전 대통

령 사저, 그리고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땅, 그 옆에 후보님 처가 땅이 붙어 있는 지도를 처음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오세훈 후보님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처가 땅 의식하고 행정행위 한 적 한 번도 없어

오세훈: 어저께 밤 늦게 토론을 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이곳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님과 이상득 전 의원님의 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상 어디에 표시돼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처가의 땅은 (땅 지도를 보여 주며)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처가의 땅이 바로 이 위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 위치를 제외하려면 여기를 다 잘라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 주변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땅값이 오르지요.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내곡동 일대 주변의 현재 시세는 평당 2,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처가의 땅이 있었다고 해서 이 땅을 만약에 제척(除斥)했다면, 다시 말해 민주당이 초기에 주장했던 것처럼 이 땅을 제외했다면 제 처가는 상당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아마 10배 가까이 벌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시절 제 마음속에 처가의 내곡동 땅은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거 치를 때 재산공개를 하면서 내곡동 땅 저 안에 8분의 1 지분이 재산공개 내역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남성이 그렇듯이, 내곡동 땅에 대해 (아내에게) 물어보는 것조차 민망합니다. 어떤 땅이냐, 어디에 있느냐, 가치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것 물어봅니까? 사실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아, 처가에 상속받은 땅이 하나 있구나, 강남 어딘가에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제 임기 5년 동안 이것을 의식하고 제가 행정행위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해명을 처음에 '내곡동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 이

런 표현을 해놓으니까 '알았는데 왜 몰랐다고 하느냐.' 논쟁이 그쪽으로 옮겨붙는데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곡동에 돌아가신 장인어른, 1970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제 아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돌아가셨는데, 40년 정도를 그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땅이 정부에 강제수용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제는 오해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상속된 땅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 같고….

그렇다면 결정에 관여했는가? 이 문제의 땅이 처음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이 되시면서 보금자리주택정책을 하면서 이름이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6년 7월에 시장으로 취임했으니까요. 2004년부터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을 보면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곳인지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논의를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에 지구지정이 제안됩니다. 지구지정 제안이라는 것은 이 일을 해야 할 SH공사가 국토부에 여기를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지요. 이명박 전 시장님 시절의 일입니다.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문서 사본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서류들을 제가 다 들고 나왔는데요. 처음에 2006년 3월에 지금 말씀드린 이 지구지정(안), 제안서입니다. 공문서입니다. 이런 공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제안서의 실제 내용은 이 뒤에 이렇게 첨부서류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숙지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전임 시장 때 가닥

그다음에 이곳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풀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SH공사 간에 계속 공문이 왔다 갔

다 하면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 논의가 한 3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2007년 3월 29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산하지요. 이때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하(下).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2월에 취임하셨나요? 그렇게 되니까 2007년 3월이면 아직 노무현 정부 말기입니다. 이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해서, 이 문제의 땅, 내곡동 땅에 대해 여기 쓰여 있는데요. 내곡동 땅을 편입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 과정에 그린벨트가 풀리는데 어떻게 시장이 몰랐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짐작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미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이 지역 그린벨트를 풀고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아까 보신 공문서대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에게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주택국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원래 서울시에는 시장까지 결재가 올라오는 사안이 있고 국장 전결, 과장 전결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원래 법령상 국장 전결로 돼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미 전임 시장님 시절에 가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지요. 실제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 3~4회 연속 집중취재하고 있는 KBS 측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당시 주택국장을 취재하고 녹음해 자막 처리해 나간 9시 뉴스를 보면 그 주택국장이 KBS 뉴스에 이렇게 말한 것이 이미 방송됐습니다. '이 사안은 시장께 보고된 사항이 아니다. 시장에게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가닥이 잡혀 SH공사와 국토부 사이에 논의가 계속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께 보고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KBS도 그대로 방영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 알 수 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상상을 못 하는 일이지요.

그러다 또 이런 공문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내곡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

지구 제안 철회', 왜 갑자기 철회되느냐.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경우에 형식적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국민임대주택단지였는데 비슷하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한 6:4, 4:6 비율로 들어가는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명이 바뀌니까 전부 다 서류를 갈아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가 서울시를 경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장까지 들어왔겠습니까? 법이 바뀌어 이름만 전부 바꿔놓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것까지 시장 결재를 받았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절차 역시 국장 전결로 처리가 됐겠지요. 그렇게 해서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이 시작됐던 일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진행되면서, 이번 선거 때 문제가 되면서 천준호 의원이라는 분이,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벌써 한 3주 전에 문제 제기가 됐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이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지정을 철회하고 다시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해 달라는 서울시의 공문이 국토부로 가는 그 서류를 들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류, 국장 전결 이 서류를 들고 오세훈 시장이 당시 국토부에 지정을 촉구했다는, 정말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거짓말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법이 바뀌어 서류가 경유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제가 지정을 촉구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해명했습니다. 그것은 촉구한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뀌어 기존에 지정했던 임대주택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형식적인 서류를 국장 전결로 보낸 서류입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정확하게 해명한 것이지요.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사항이니까 그나마 신속하게 바로 그날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다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비틀거나, 본질을 흐리거나 했던 일들에 불과합니다. 아마 그러면 물어보실 거예요. 무슨 측량 현장에 오세훈이 등장했다. 그리고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점퍼를 입었다나, 그러는데요. 3명이나 봤다는 것은 그 측량 현장에 갔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2005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사회: 후보님, 죄송한데요. 저희 패널들이 질문을 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할 질문이 없어지거든요.

오세훈: 그렇게 하십시오. 차근차근 답변하겠습니다.

사회: 이어 경향신문 구혜영 정치부 선임기자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혜영(경향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오 후보께서 모두발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임기 5년 동안 의식하지 않고 그에 맞춰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 나오셨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는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미 부동산 문제는 공정의 문제로 국민이 받아들일 만큼 공분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책 신뢰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오 후보님의 해명을 종합하면 여러 가지 쟁점마다 해명이 바뀌거나, 논란에 대해 불충분한 해명,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토론회에서도 강조하신 것이 SH와 국토부가 협의한 사항이라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 입장을 어제도 강조하셨는데 제가 2008년 10월 14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속기록을 봤습니다. 당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 지역에 10~25층 높이의 고층아파트 건설을 계획한 국토부의 계획을 서울시가 친환경 저층 주택으로 건

설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국토부와 상의했느냐고 당시 강창일 의원이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께서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답변으로 보면 오 후보께서 이미 2008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국토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같은 국토부 구상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대안도 제시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답변 내용 기억하십니까?

오세훈: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요.

구혜영: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세훈: 그것이 몇 년도이지요?

구혜영: 이것이 정확하게 2008년 10월 14일입니다.

오세훈: 13년 전 일이고요. 2008년, 2021년…. 13년 전 일이지요.

구혜영: 제가 서두에 이 문제가 주요 선거에 나오셨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이나, 후보께서 각종 인터뷰라든가 국회에 나와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것도 사전에….

오세훈: 이 국감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구혜영: 한번 회의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한번 보시고 그것도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지요?

구혜영: 아니, 이것이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했다고 하셨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의 의견을 시장이 직접 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구혜영: 그러면 그것도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의 의견을 시장이 직접 어느 자리에서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서류로 전달됐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 전결 사항으로 다 처리가 된 상태에서 아마 이 질문이 사전에 예측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다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라는…. 국감을 준비하면, 다 취재를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사전에 질문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라고 이야기가 오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답변을 사전에 다 준비합니다. 그렇게 국감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이 질문이, 아까 강창일 의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구혜영: 네.

오세훈: 의원님이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면 질문을 담당 부서에서 예측하지요. 그래서 그 전날 하루종일 쭉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모범답안이 미리 제 책상에 올라오지요. 그러면 하루종일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 답변합니다. 마치 속기록을 보면 제가 그 자리에서 기억하고 답변한 것처럼 모양이 돼 있지만 사실상 국감 회의록은 그런 식으로 작성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혜영: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 오 후보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신 내용도 제가 살펴보니까 있던데요.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김효수 전 주택국장이 이 개발과 관련한 주택공급계획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가 김효수 국장이 당시 오 후보가 '구릉지의 성냥갑 아파트는 가급적 배제하고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만들자고 해서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세훈 시장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만들자고 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발언을 보면 오 후보께서 당시에 보금자리주택,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이미 내곡동 땅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으냐….

오세훈: 거기에 내곡동 땅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는 서울 내에 짓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성냥갑 모양의, 판상형 아파트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을 이제 더는 짓지 말고 디자인 개념이 들어간, 그런 아파트를 짓자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굳이 보금자리주택이나 여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곡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시니까 이거 내곡동에 대해 알았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석되지만 당시 그 말은 거의 입에 붙어 있었던, 아시지 않습니까? 디자인 서울을 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언급을 그 자리에서 한 것을 그렇게 속기록이 적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구혜영: 그런데 어찌 됐든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을 전했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께서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라는 발언…. 이런 것으로 보면 물론 전결사항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답변을 하려면 최소한 보고를 받으셨거나 이 정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하지 않았

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2008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국토부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시는 이 구상에 어떻게 반대한다는 것을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보금자리주택' 특정한 지시 한 적 없어

오세훈: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아마 했다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겠지요.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추진하는 자리가 내곡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때도 내곡동만 따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추진되던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아마 종합적으로 리스트업해 그 서류를 가지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 만약에 언급을 했다면 일반론적인 지시를 했겠지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아파트의 디자인을 살리고, 이렇게 지시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갖다 붙여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 특정한 지시를 한 것처럼 착각이 들 수 있도록 해석하시는데요.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는 크고 작은 7국 본부가, 산하단체까지 해서 약 250개의 세부부서가 존재합니다. 이 질문은요,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복지부의 과(課) 단위에서 한 일을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복지에 신경 쓰라고 하니까 그 복지 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해석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총 책임을 지는 지휘자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시를 합니다. 특정 사업의 경우에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나 계장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리고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들어와 보고하는 일도 극히 드뭅니다. 아주 시급한 현안이 아니면 통상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을 통해 보고하지요. 그런 상황이 시의회 속기록에 그런 식으로 인용돼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보금자리주택, 특히 내곡지구를 알고 지시한 것 아니냐. 이것은 정말 큰 견강부회(牽强附

會)입니다.

사회: 그 정도에서 정리하고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김대영(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거듭되는 보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 후보께서는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주택지구 지정은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시장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심각했던 사안에 대해 과연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인지. 또 하나는 SH공사의 내곡동 보금자리 지정제안서 관련 문건에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라고 분명히 적시돼 있는데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국장 전결사항도 외부로 나갈 땐 시장 직인

오세훈: 사실 이 정도 사안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있는 사안에 들지도 못합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 같은 곳은 엄청난 갈등이 존재하고, 정말 시장이 관심을 기울여 갈등을 해소해야 할 그런 사건들이 빈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지역에 땅을 수용하는 정도의 일은 거의 갈등이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보상가에 대해 늘 토지주들은 불만이 많지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 어느 나라 정부든지 간에 땅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수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문제가 되고 나서 이 사건을 많이 처리했던 법조인,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하는 업무를 처리했던 분들이나 또 그 사건을 주로 했던 법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상 정상적으로 팔면, 거래하면 얻을 수 있는 토지가격의 90% 정도를 토지수용가로 결정하고 소송을 제기

해 오면 마지못해 한 10% 더 보태 소송비용 정도 빠질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보태 수용판결을 한다고 그럽니다,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 토지수용가격을 통보받는 주체들은 처음에는 다 분노하지요. 내 땅이 왜 이것밖에 가격이 안 가느냐, 그러다가 소송하게 되면 법원에 불려 다녀야지요, 비용 쓰지요. 그러고 결국 올려주는 것은, 변호사들이 10~15%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익을 비교하게 되지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뺏기고, 돈을 쓰고 변호사 비용 쓰고 이것 정도 더 받으면 이것을 소송하는 게 나은가? 마나? 고민하다가 결국 결론은 그냥 준다는 돈 받자, 이런 쪽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권리의식이 강한 분들은 법원까지 사건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정도로 이해관계가 큰 데, 이것이 시장에게 보고가 안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바에 비춰 봐서 전혀 이해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문서에 서울시장 직인이 찍혔다, 아까 여기에도 찍혀 있지 않습니까? 보여드렸던 이 서류에도 찍혀 있는데요. 국장 전결사항도 외부로 서류가 나갈 때는 항상 서울시장 직인을 찍습니다. 그것은 과장 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닙니다.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똑같이 이런 관행대로, 이런 법령대로 서류가 처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이 사건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아니 그린벨트가 풀리는 중요한 사안인데 어떻게 국장 전결이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정도의 사안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희귀한 경우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의 법령에 입각해 국장 전결로 처리한 전형적인 사례였다는 것,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이어서 김홍수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홍수(조선일보 논설위원):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의혹 건은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오 후보님의 해명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아 의혹 제기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곡동 땅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 재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오 후보님 서울시장 재직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그리고 2008년 서울시장 재산신고 항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 후보님이 초기에 '땅 존재도 몰랐다.', '임대주택 지정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이게 뭐지? 상식적이지 않다. 잘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실수 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까?

'존재조차 몰랐다'는 표현이 빌미 제공한 듯

오세훈: 착각이라기보다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제가 반성하게 되는데요. '존재조차 몰랐다'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제 의식속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사실 선거하면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답변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았다가 돌아가 캠프에서 확인을 지시하고 확인돼 돌아오는데 적어도 반나절이나 하루 이틀이 걸려요. 이번 사건은 처음에 그렇게 대처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기억나는 것이 그날 아침에 마곡지구에서 무언가, 현장에서 서남권 발전방안에 관해 언론인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제 기억에 10시나 10시 반 정도였는데 이 문제의 기자회견을,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차 속에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후보자는 고민합니다. 이것이 나가게 되면 바로 확산될 텐데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지요. 그래서 '빠르게 이거 방안이 없느냐?', 그랬더니 '10년 전에 해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은 모바일 시대니까 순식간에 휴대전화로 받았어요.

사실은 기자회견 내용이나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1시간 전쯤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대처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제 첫 해명이 나갑니다. 사실은 이러한 신속한 대처에 당시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기사에 반론까지 같이 실렸으니까요. 신속한 대처에는 성공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그다음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해명할 때 썼던 표현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과한 표현이 있었고,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이 시작이었고요. 그다음에 '존재도 몰랐다'라는 표현은 그다음 날 하룻밤인가 이틀 밤을 잔 다음에 나온 표현인데요. 솔직히 말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처가에서 상속받은 재산이고, 분명한 것은 큰처남이 8분의 3 지분이고, 작은처남 8분의 2 지분이고…. 제 처가의 형제가 2남2녀입니다. 그다음에 제 처와 처제가 8분의 1씩, 장모님이 8분의 1, 이렇게 상속받은 땅인데요. 8분의 3이나 8분의 2를 상속받은 큰처남과 작은처남이 있는데, 설혹 집사람이 이번에 우리 몫으로 이 땅 강제수용된 것 얼마가 나왔다고 저한테….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 떼고 나면 한 4억 원 되겠더라고요. 4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통상 대한민국 남편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아 그래? 참 큰 도움 되겠다, 이거. 고맙네. 장모님께 다음에 만나면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 정도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새까맣게 까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 의식하고, 내곡동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일을 하게 됩니까? 그전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재산 신고하는데 그전에는 내곡동 땅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겠지요.

사회: 잠깐만요. 시간을 너무….

오세훈: 이것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사회: 그동안 했던 질문도 있고 그래서요. 또 패널들 답변을 통해 답변하실 시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을 계속해주시지요.

김희원(한국일보 논설위원): 말실수가 나온 김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해명이 조금씩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구체적인 팩트가 조금씩 바뀌면서 논란을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세훈: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그것을 자꾸 거짓말했다, 말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존재조차 의식 못 했다'는 말을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김희원: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면, 그것 하나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공직자가 자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느냐의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고, 그 여러 정황을 보여주는 팩트를 하나씩 검증하는 과정이 선거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훈: 물론 그렇습니다.

김희원: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아 그것은 좀 유감입니다.

오세훈: 신속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런 사안의 경우에 선거국면에서는 신속한 대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김희원: 그런데 단지 상대 후보에 대해서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유권자에게 해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측량 현장에 갔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곡동 문제 제기되고 나서 처가 패닉상태

오세훈: 그 점에 대해서도 오해가 풀려야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저희 처가는 패닉상태입니다. 거의 초토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지은 죄도 없으면서 서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제 눈치를 봅니다. 또 저도 아내 눈치를 봅니다,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될까봐. 또 장모님은 장모님대로 펄펄 뛰시다가 그다음 날은 전화하셔서 걱정하다가, 이런 모습이 온 집안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요. 왜 그렇냐면, 처음에 큰처남이 분명히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장인어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장인어른은 장모님과 재혼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장인어른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40년 가까이 지속돼 매우 아름다운 로맨스로 보도되고 그런 적도 있는데요. 장인어른은 분명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조차 누가 같이 갔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제가 안 간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큰처남은 분명히 갔습니다. 여러 사람, 장인어른도 기억하세요. 그런데 큰처남은 작은처남이 간 것을 기억 못 합니다. 작은처남은 자기도 잠깐 갔다 왔다고 기억합니다. 이것이 16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그런 대화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역시도 전혀 안 갔지요. 제 기억에 없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회: 알겠습니다.

오세훈: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KBS라는 유력 언론이 계속해

증인을 발굴해 측량팀장도 저를 봤다, 측량 현장에서. 누구도 봤다, 밥까지 같이 먹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저도 이거 내가 갔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것 아니야? 처남들처럼 나도 기억이 흐려져, 더군다나 기억력이라는 것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언급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것을 소재로 쓰거나 하면 기억이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다음부터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면 5~6년만 지나도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인간의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회 답변할 때 '저는 분명히 안 갔습니다. 그런데 기억력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회: 말 바꾸기라는 공격을 계속 받으시니까 거기에 대해 본인의 기억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고,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그렇습니다.

사회: 이 논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내곡동 땅 관련해 대강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거의 다 짚은 것 같고 한 가지 문제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보상문제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조금 있어 그 부분에 대해 김대영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김대영: 내곡동 땅 공시지가 2005년에 43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148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5년 만에 3배 넘게 올라 36억 원 정도 보상을 받았고요.

오세훈: 5년 만에 올랐다고요?

김대영: 보상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지요, 36억 원. '내곡동 땅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말씀을 얼핏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와 또 그린벨트가 풀리고 토지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후보님의 시각과 일반인들의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내곡동 땅 시가보다 낮게 보상받았다

오세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그린벨트가 풀려 보상을 받게 되면 이익을 보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손해를 보는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관계상 제지당했는데요. 토지보상 업무를 한 분들 대부분 공통된 의견은 실제로 팔면 받을 수 있는 가격의 한 10~20% 적은 금액을 정부가 제시하는 것이 통례이고 소송을 하게 되면 한 15~20%까지 더 받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초기에 해명했던 자료인데요. 이 위치의 토지보상가입니다. 저의 처가가 받은 것이 약 4,443㎡, 1,000평이 조금 넘지요. 여기에 평당 271만 원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보상받을 당시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조회해보니까 이 근처에서 거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당시의 시가를 보니까 들쭉날쭉한데 평균 317만 6,038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한 40만~50만 원을 손해 본 것이지요. 아마 저의 장모님도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말아야 하나 아니면 더 달라고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소송을 해야 하나. 그런데 이의신청이나 소송의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본인도 기억 못 하시고, 저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속으로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우리 사위가 그래도 서울시장을 했는데 장모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아마 고민하셨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냥 정부에서 제시한 보상가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 금액이 시가보다 분명 평당 40만~50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종합해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 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면서 형식적으로 서류가 오가는 절차 끝에 결국 이 지역의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그 보상의 결과가 시가보다 낮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린벨트를 풀면서 그린벨트가 풀린 상황을 전제로 가격이 오른 것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게 일하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지요. 그린벨트가 풀리기 전 가격을 전제로 보상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당시 보상 시점에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조금 전에 자료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명된 것입니다. 당시 시가보다 단 1원이라도 더 받았다면, 그러면 당시 시장의 영향력이 무언가 거기에 미쳤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가보다 낮게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것을 이렇게…. 서울시민은 지금 비전과 정책을 듣고 싶은 시점인데 계속해 관훈토론회에서조차 거의 45분 동안 이 이야기만, 이것이 서울시민 여러분은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비전을 들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 비전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판단은 유권자들에게 넘기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내곡동 문제가 떠오른 이유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급등한 집값 때문에 두 후보 모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고 있지요. 오세훈 후보 공약과 실현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김대영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폭탄' 그런 단어가 유행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공시가 재산정을 요구

하고 나섰습니다. 공시가가 가장 크게 오른 지자체가 사실 서울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책을 강구할지 말씀해주십시오.

소득 없는 1가구 1주택 재산세 면제해야

오세훈: 공시가가 오르는 것은 재산세·종부세와 연결될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더 타격이 큽니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62가지 각종 처리의 기준이 되지요. 한 마디로 재산 손해를 엄청나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결해야 해 여러 가지 해법을 그동안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작년에 너무 올라 지금 액수를 통보받으면 전부 기절초풍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10%만 올리겠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많이 올라 거기에 10%만 올려도 타격이 큽니다. 올해는 적어도 동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3억 원까지 기준으로 돼 있고, 6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5,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 거의 정확한 통계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과세 구간을 바꾸는 것에 더해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니까 세율은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고요.

아울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 노후대책으로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현금 수입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들은 전부 법 개정사항이고 중앙정부 사항이어서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자격으로 정

부와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시가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데 따른 경제적인 불이익은 반드시 원위치시켜야 한다. 이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김홍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보유세 개편내용은 국회에서 입법사항으로 고쳐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정치지형에서는 야당 시장이 하기는 힘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지…. 왜냐하면 보유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세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이 시작됐지요?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이낙연 대표께서는 '굉장히 후회한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통렬히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표면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뀔 수 있다, 바뀔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김희원: 부동산 공약의 근간이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하고 민간개발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공급은 사실상 빨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과거 경험을 보면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집값을 잡을 수는 없어요. 집값 안정이나 양극화를 방지하는 것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SH공사 공급 물량, 시중 공급가보다 싸게

오세훈: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지적이고 또 걱정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이 되면 주변의 집값을 일정 정도 자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장이 결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것이 바로 그런 과도한 걱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약간 오르더라도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만 시장에 주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부동산가격 폭등과 같은, 이런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동산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면 자산 격차가 더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지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중에 돈의 흐름이 느려지고 통화량이 적어지지요. 따라서 불경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오르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 누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정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너무나 쉬운 길을 택했던 것이지요. 무조건 재건축·재개발은 전부 다 억제해 버린 것입니다.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정했던 재개발·재건축 700여 지구 중에 박원순 시장이 약 400개를 전부 합법적인 모습을 갖춰, 시민동의를 받는 형태를 갖춰 해제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런 주택시장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SH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시중 공급가보다 싸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곡지구와 발산지구입니다. 마곡지구와 발산지구는 강서구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를 수용해 토지를 분양할 때 건설원가를 계산해 평당 600만 원 정도에 분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수용해 물려받았던 박원순 시장은 본인 임기 때 투자한 것도 없으면서, 발산지구를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마곡지구를 분양하면서 그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싼 가격의 주택이 우리 동네에 수천 가구가 들어온다고 하는 사

실을 알게 되면 그 동네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관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고 나중에 사자, 소비자의 심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에 공급하면 '아, 이제 집을 사도 되겠다'라는 신호(signal)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릅니다. 따라서 SH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적어도 시중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덜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원가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땅값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싸게 수용했기 때문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SH나 LH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제가 분양한 것에 몇 배씩 받고 분양했습니다. 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공공에서 분양하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싸게 함으로써 시중에 미치는 영향을 선한 영향, 하향 안정화의 영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던 것이지요.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시장이 챙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침을 두지 않으면 SH공사나 LH 본능대로 갑니다. 시장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그런 데에 대해 가끔 불러 '요즘 얼마에 분양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서류 하나에 사인하고, 결재하고 이것이 시장의 일이 아니에요. 큰 방향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시장의 일인데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은 철저히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약 25만 가구가 10년 동안 공급될 수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자충수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사회: 후보님, 잠깐 옆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곡동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토론회 남은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패널 여러분께서도 준비된 질문 중에서 합칠 건 합쳐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한 문제 중에서는….

김대영: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사회: 네.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후보님도 그동안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맞토론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질문도 축약해서 해주시고, 답변도 가능한 짧게 요점과 핵심 위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김대영: 오 후보께서는 '강남과 목동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고 말씀하셨고, '층고규제 완화하고 용적률 상한규제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면 시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시의회를 사실상 좌우하는 상황인데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하고 관철하실 생각인지가 하나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한강변 아파트 규제가 철폐되면 그쪽에 부동산가격이 더 뛸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 한강변 고층아파트 숲이 들어서면 바람의 통로를 막는 열섬현상, 그리고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고 그러는데 한강변 재건축과 한강 조망권, 경관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두 가지 말씀해주십시오.

민주당 위주 시의회 설득 충분히 가능

오세훈: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변에 35층 높이규제 때문에 성수전략정비 1·2·3·4구역이 전부 올스톱된 상태에서 1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층을 넘으면 건설원가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50층 정도가 최대치(maximum)인데요. 예를 들어 35층을 45층이나 48층으로 허가하면 건물이 뚱뚱한 것이 가늘어집니다. 날씬(slim)해져요. 여러 개 지을 것이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통경축(通經軸)이 생겨나고 관망, 조망권이 보장되는 형태로 건축됩니다. 가장 쉽게 비교하려면 잠실의 재건축아파트단지를 보십시오. 거기는

과거 성냥갑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아주 답답한 모양의 아파트들이 전혀 바람이 통하지 않고 조망이 보장되지 않은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건너편 성수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지역이 더 조망권과 통경축이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낫다, 더 바람직하다 하는 형태인지를 금방 육안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을 통해,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많이 받았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 동네 용적률 풀어달라, 높이 제한 풀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방침으로 재건축·재개발을 눌러놓았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 하고 국토부가 요청하는 것을 서울시가 수용하는 형태로 그동안 유지돼왔는데요. 실제로 시의원·구의원님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매일 동네에서 이 민원으로 정말 샌드위치 신세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들어가 협의하겠습니다. 마침 대선도 앞에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 원칙 끝까지 고집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지금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는 해법이 안 돼요. 강남에 물량이 부족한데 강북에 집을 지어 가격을 누른다? 안 됩니다.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데 주변에 위성도시를 만들어 해결한다?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된 해법을 못 찾은 거예요. 더군다나 3기 신도시 아직도 토지수용 중입니다. 이거 지어지려면 아직도 몇 년 걸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택 공급하려면 서울의 규제를 풀 수밖에 없고 용적률 규제, 높이규제 풀어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시장의 힘을 무시했다가 4년 만에 이 정부가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반성문 쓰기 시작합니까? 이런 것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선거 끝나고 또 안 하면 그때 제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시의회가 이것을 방해하고 안 해줘 못합니다'라고 국민께 동의를 구하고 평가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시의회가 안 해주겠습니까?

김홍수: 제가 재건축 관련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한강변 층고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 다른 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층고와 용적률을 올려주되 대지의 상당 부분을 기부채납해 그 공간을 공공재로의 녹지공간 같은 것을 만들면 윈윈(win-win)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구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과도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응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후보님이 생각하는 최적의 균형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건축 시 대지 기부채납 비율 타협점 모색

오세훈: 그것은 그 지역의 사업주체와 협의해야 할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압구정지구입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압구정지구에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비율을 그때 제 기억에, 이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40%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발이 컸습니다. '아니 내 땅을 왜 40%나 내놓으라고 하느냐.', '40%를 내놓지만 그것 이상 용적률을 높여 경제성을 만들어드립니다' 하는 협의가 결국은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니까 그것조차 불가능해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고들 그래요. '아이고 옛날에 오 시장이 하자고 그럴 때 했으면 지금쯤은 다 끝나 있을 일인데'라는 반성의 분위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비율, 이것이 40%가 됐든 30%가 됐든 어차피 한강변에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다른 서울시민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께 큰 재산상 이익을 주는데 기부채납 받는 것을 만약에 많이 줄여준다면, 강남 특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런 시민 여론을 의식해 기부채납 비율을 많이 제시했던 겁니다. 얼마든지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그렇게 협의해 적당한 타협점이, 저는 지난 15년 동안의 경험 때문에 타협점 모색이 가능할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방청석에서 온 질문 중 하나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세금을 내리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1가구 1주택의 세금폭탄을 통과하려면 집을 팔거나,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융자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아주 어려운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저금리 특별융자 지원제도 같은 것을 만들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세훈: 그것도 해법이 될 수 있고요. 주택을 담보로 해 노후자금을 미리 끌어다 쓰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 이하의 서민주택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어차피 금융이거든요. 미리 은행 돈을 가져다 쓰고 나중에 그 주택을 가지고 사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요.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회: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두 번 하셨고요. 선거 다음 날부터 결재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장 시절에 수행했던 정책의 공과를 짚어보는 것도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조선일보 김홍수 논설위원부터 서울시장으로서의 정책 능력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저는 서울시장 재임하실 때 했던 토건사업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 르네상스나 서해뱃길 같은 토건사업을 하셨는데요. 한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 세금이 들어가기도 했지요. 2011년 감사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

장은 서해뱃길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세금을 낭비한 전시행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재직시절에 하셨던 토건사업과 관련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반성되는 점이랄까, 후회되는 점이랄까, 그런 점은 없습니까?

'한강 르네상스' 실패한 사업 아니다

오세훈: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뱃길 사업은 사실은 중앙정부의 사업이었지요. 서해에서 배가 한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이 항구도시가 되는 것이지요. 꿈같은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현된다면 서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거기에 이명박 시장께서 경인아라뱃길이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서울 시계 외에 있으니까 중앙정부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요. 서해뱃길,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서해로 배가 드나들면 양화대교를 통해 여의도 선착장까지 배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쓸모없는 사업일까,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이 정부는 특히 민주당은 끊임없이 '경인아라뱃길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배가 들어오면 배를 대고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여객터미널이 있어야 뱃길을 이용하는데 터미널을 안 만들어주고, 박원순 시장도 한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환경단체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좌절된 건데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지적은 경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경제성을 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한강 르네상스는 두 가지 콘셉트입니다. 회복과 창조. 회복은 자연성 회복입니다. 제가 한강 르네상스를 시행하기 전 서울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겨울만 빼고 봄·여름·가을 날씨 좋은 날이면 한강변에 정말 많은 시민이 행복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은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치맥도 하고요.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펴놓고 하루종일 누워

독서도 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만들 때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강을 그 상태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단체, 그 당시의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환경단체 출신인데 그것 때문에 사이가 몹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현황을 보십시오. 자전거길과 산책로를 분리하는 사업을 했고요. 군데군데 시민들이 쾌적하게 드실 수 있는 곳, 즐길 수 있는 곳을 집어넣었습니다. 매점이 매우 열악했는데 지금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이런 것이 한강 르네상스의 핵심입니다. 과연 이것을 토건사업이라고 매도하면서 지금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아마 20~30대 젊은이들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연혁을 잘 모를 텐데요. 특히 이 사업 이전 한강의 모습을 모르실 텐데요. 그때는 한강에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분리됐는데도 주말이면 어깨를 부딪치면서 걸을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킥보드길'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를 고려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써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군다나 여의도지구, 반포지구, 뚝섬지구, 상암 그쪽에 만들어 놓은 이 지역들…. 거기에 캠핑장과 노을공원, 하늘공원 같은 곳은 정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이런 천국 같은 공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날씨 좋은 날은 정말 많은 시민이 즐기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공간을 늘릴 필요가 점점 더 생길 겁니다.

사회: 좋은 시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듣고요. 구혜영 위원님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혜영: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약을 보면,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보면서 2009년에 발생했던 용산참사, 이 부분이 갑자기 같이 생각났습니다. 이 참사가 주택공급이라는 목표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난

개발의 시작이었다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선관위 토론회에서 '개발과정에서는 큰 갈등이 발생한다. 가슴 아픈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산참사에 대한 오 후보님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당시에 조합과 피해자들의 문제라면서 유감 표명, 조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 총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유감인지, 입장을 표명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용산참사, 과도한 폭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

오세훈: 사실관계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안 갔다, 당사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조문도 갔고요. 당사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영걸, 나중에 부시장이 되셨지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의 총책임자 본부장이셨습니다. 그분이 거의 몇 개월 동안 다른 일을 전폐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셨습니다. 유가족들을 달래고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사실 용산참사는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연'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것을 쏘면서 저항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이 사후처리를 서울시가 맡아 했던 것이고 보상문제나 피해자들과의 각종 협의 문제도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했던 것이라는 본질을 일단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조문을 한 것도 사실이고, 협의에 나섰던 것도 사실이고, 본부장에게 전권을 주어, 그분은 그 일만 해결하도록 해 이것이 협의 과정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공표는 안 했지만, 백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공개되겠지 했는데 그 자료가, 협의 과정이 다 소상하게 기록돼 있는 것이 서울시의 어느 캐비닛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어제는 짧게 답변하느라고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만 드렸는데 정말 서울시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주택공급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야 올바른, 바람직한 행정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극한투쟁과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시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느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오세훈 후보에 대해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김희원 위원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희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몇 차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서울시장을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셨고, 그러나 '선별지원 원칙은 옳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원칙적인 것을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10년 전 상황을 보면 사실 서울시의회와 당시 시장님이셨던 오 후보 간 협의가 상당히 근접해 있었고,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하자는 안을 실행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당이 만류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부친 것은 결국 보수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오세훈: 이 논란, 정말 저한테는 크게 후회되는 대목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상급식 하나로 끝날 문제였다면 제가 그때 그렇

게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까지 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대로 협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저는 처음에 중위소득부터 시작해 그때 제 기억에 상위 70%인가, 80%까지 양보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상위 20~30%만 주지 말자. 이 돈으로 그 밑에 중위소득 이하 가정 자제분들 공교육 강화에 쓰자. 학습 기자재 지원, 영어 원어민 교사, 방과 후 학습…. 공교육만으로도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교육 사다리를 놓는 데 씁시다, 라는 것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공교육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 사다리를 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공존과 상생의, 나라의 가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아이들 밥 안 줬다, 이것은 너무 억울한 평가이고요. 오히려 진보당 입장에서, 좌파정당에서, 진보를 원칙으로 하는 정당에서 저 같은 주장을 해야 옳습니다. 그분들은 입만 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당이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시의회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당시 시의원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중앙당의 지침이 100%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자세입니까? 더군다나 이것 하나로 끝낸다는 보장이 있었던 상태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무상등록금, 무상의료 줄줄이 시리즈를 내놓고 이것으로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하나의 전략·전술에 동원된 그런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저는 선거를 치른 지 1년밖에 안 된 시장이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듬해에 총선과 대선이 이어졌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허물어집니다. 따라서 제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적임자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것인데 주민투표도 제가 제안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시민 여러분 약 90만 명이 서명해 주민투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과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부끄럽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해서 참가

거부 운동을 펼쳤습니다. 세상에 정책선거, 정책투표가 나쁜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투표 거부 운동 때문에 개표조차 안 된 것입니다. 그때 투표 참여율이 약 25%였습니다. 사실 그 정도 투표 불참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25% 정도 참여할 것이 예측됐었기 때문에 자리를 걸면 조금 더 많은 분들, 저를 시장으로 찍어주셨던 분들은 다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자리를 걸었던 것입니다. 과연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가. 결과적으로는 시장직을 놓음으로써 그 이후에 시정이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책감에 시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것이 시금석이라는 심정으로 제방에 뚫린 조그마한 구멍을 막는다는 심정으로 손을 들이밀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어졌던 것이라는 점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원: 총대를 메고 선별복지의 이념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 논쟁은 사실 지금까지도 한국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그렇습니다.

김희원: 하지만 어쨌든 복지혜택이 늘어나고 있는 그 거대한 역사적 흐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을 새로 바꾸면서 기본소득을 첫 번째 정책에 올렸습니다. 안심소득을 공약으로 내셨는데 그것은 기본소득과는 차별화되는 선별복지 정책이지요?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안심소득, 어려운 분들일수록 큰 복지혜택

오세훈: 기본소득을 광의로 보면 안심소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그

렇게 정강정책에 집어넣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정부·여당조차 피해가 큰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에 도표까지 준비했는데요. 안심소득은 하후상박(下厚上薄), 어려운 분들일수록 크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바꿀 수만 있다면, 워낙 복지체계가 복잡하고 굳게 뿌리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틀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안심소득 시스템입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비슷한 점이라고는 정부 재정을 많이 투입해 일률적으로 현금을 나눠준다는 점에서만 같지 그 외에는 공통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안심소득이 국민의 뇌리에 어느 정도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굳이 1년짜리 시장이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을 넣었습니다. 이 논쟁이,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서울시의 안심소득이 꾸준히 국민께 홍보되고 이해된다면 아마 국민 여러분도 어느 시스템이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복지 시스템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해주실 것으로 예측합니다.

사회: 이번 선거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김대영: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性) 비위'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비위 문제는 꼭 여야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고, 서울시장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한 데 비해 견제장치가 없어 발생했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서울시장의 권한 문제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10년간 서울시를 이끌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로와

과오, 공과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시작해놓은 일 계속 추진할 것

오세훈: 첫 번째 질문은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은 약체시장입니다. 제가 당선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시의회의 90% 이상이 민주당이지요. 시의회 때문에 꼼짝달싹 못 하고 아마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들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장님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도하게 비대화된 서울시장의 권력을 고민하는 것은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10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생긴, 한 마디로 권력집중으로 생긴 그런 제어되지 않은 권력의 불행이었던 것이지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박원순 시장의 공과…. 사실 철학을 달리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만 지적하자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전철 사업, 제가 7개 노선 시작해놓고 나온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취임 초에 전혀 고민도 없이, 공부도 없이 취소했던 것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교통 사각지대에 경전철까지 놓게 되면 정말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대책 없이 취소했다가 한 3~4년 흐른 후에 깨달은 것이지요, '아, 이거 큰 실수했구나' 하며 다시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행태가 도시, 건축 모든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전부 잘못한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시작한 것이 시장이 시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들어왔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왜 했는지, 이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적어도 몇 달은 공부하고 판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야당 입장에서 공약했던 것을 그대로 밀어붙여 실행하다 보니 생긴 엄청난 세금의 낭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놓고도 책임을 못 지는 위치가 된 것은 참으로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공과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공이

라고 말씀드리기보다 계승을 해야겠다고 평가할 만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입돼 후임 시장이 들어가 뒤집으면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을 해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비록 저와 철학은 달리하지만 계속하겠다는 것을 출마 선언 때부터 강조했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후임 시장이 들어와 아무런 고민도 없이 대형 시책사업들을 뒤집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정말 시민께 큰 죄를 짓는 건데 저렇게 죄의식 없이 일처리를 쉽게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정치철학이나 행정철학과 맞지 않더라도 박원순 시장께서 시작해놓은 것은 마무리까지 하고 지속하겠다. 그것이 시민의 비판여론이 매우 비등해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면 계속해 시행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굳게 하겠습니다.

사회: 시간이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패널들께서도 꼭 해야 할 질문 한 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질문 하나 정도씩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시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지만, 광화문광장이 또 공사 중인데요. 과거에도 광화문광장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서울시장 하셨을 적에도 스노보드대회,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금 낭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광화문광장 공사는 특정 건축가의 노욕

오세훈: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사 구간의 일부에서 조선시대 유물이, 유적이 발견돼 그 부분에 관한 한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장 권한대행이 시작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광화문광장을 중앙에서 편측으로, 중심축을 옮기는 것은 한 건축가의 노욕입니다. 승효상 건축가, 실

명을 거론해도 좋습니다. 이분이 서울시의 건축행정에 지대한, 박원순 시장의 사실상 건축멘토 역할을 한 분인데 이분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처음에 광화문광장을 만들 때 중앙안과 편측안을 놓고 격론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도 했고, 전문가 패널 조사도 했고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편측안보다는 중앙안이 압도적인 다수로 지지받고 통과돼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승효상 건축가가 서울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때는 이것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신도 양심상 손을 못 댔겠지요. 그러다가 이것이 한 10년 정도가 되니까 그 틈을 타서…. (승효상 건축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학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건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에 취임했습니다. 그걸 이용해 지금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계신 분의 인품으로 보아, 또 제가 보았던 행정스타일로 미루어 이런 무리하게 공사 착공할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건축가의 노욕이 뒤에 그림자처럼 있다고 짐작을 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 있는 광장을 자기 뜻대로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옳지 않지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이라도 일단 시작됐으면 존중한다는 저의 이 자제력과 행정에 대한 존중의 마음 때문에 갈등 중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이어서 다음 질문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홍수: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 질문인데 코로나19 사태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음식물이나 상품을 택배로 시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포장재 쓰레기 같은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쓰레기를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 소화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더 이상 서울시의 쓰레기를 못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님의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인천시와 협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시던데, 그럴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매립지가 없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기술발전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의 유독가스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첨단 소각장을 도시 내에 많이 짓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플랜을 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쓰레기 매립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

오세훈: 맞습니다. 참 큰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사실은 재활용이 1순위이고요. 소각이 2순위입니다. 매립 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쓰레기 정책이돼야 하는데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배달문화가 급증하면서 다시 또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시 박남춘 시장님께 읍소해볼 생각입니다. 서울시에는 주택을 지을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립할 땅은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지요. 참으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민 여러분께 읍소하고, 시장님께 읍소해 매립지를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1순위 해결책입니다. 제가 2006년도 서울시장에 취임해 먼저 해결했던 가장 큰 갈등사례가 서울 시내 동서남북에 있는 네 군데의 쓰레기 소각장, 그 당시 이용률이 20~30%에 불과했습니다. 타 자치구의 것을 받지 않아요. 권역별로 쓰려고 소각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다른 자치구, 인접 자치구 것을 받지 않아 이용률이 20~30%에 머물고 있던 것을 취임하고 1년 내에 다 해결했습니다. 갈등해소 모범적인 사례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랬던 소각장이 벌써 연한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소각장도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연한이 다 됐으니 우리 동네에 있는 소각장을 옮기라는 민원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고 공격적

인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행정 능력이 있는 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4개의 소각장 당시에 모두 가동률을 제대로 올렸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자치구의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들어가 그 갈등 관리능력을 발휘해 어떻게든 해결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진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관련 공무원들의 설명도 들어보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희원: 다음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일화 상대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시를 공동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직책을 맡기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 대표가 합당이나 입당을 하지 않아도 추진하는 것인지, 또 나중에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협력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훈: 한 마디로 무슨 맞바꾸기(barter)를 한 것 아니냐,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공동운영은 철학을 같이 하고 정책을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시정운영 형태입니다. 독일의 연립정부가 매우 성공적입니다. 독일의 통일도, 그리고 독일 라인강의 기적도 연립정부로부터 가능했습니다. 저와 안철수 후보가 만날 때마다 두 손을 굳게 잡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새 정치의 대명사였다. 우리가 진짜 이제 새 정치를 해야 할 세대가 된 것 같다. 새 정치 한번 보여드리자.'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코 자리 나눠먹기 수준에 머무는 공동경영이 아닙니다. 철학과 원칙을 함께하고,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을 계속 조율해가면서 정기적으로 만나 서울시의 경영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런 것이 연립정부이고, 이런 것이 상생의 협의 정치구나'라는 것

을 시민 여러분이 보고 동의하실 수 있는 형태로 서울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혜영: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 후보께서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증치매환자'라고 표현해 많은 비판을 받으셨는데요. 각종 막말은 기존의 클린 이미지로 정치를 시작했던 오 후보의 이미지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낡고 부패한 이미지를 부각했는데요. 왜 이렇게 변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중증치매환자' 같은 표현 안 쓰겠다

오세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기간에 드렸던 표현이 아니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광화문광장에서 연일 조국 사태 때 분노한 서울시민이 모여 많은 집회를 했지요? 그때 우리 당도 주말마다 집회를 했는데 그때 어느 집회에서인가, 제가 연설을 그리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당에서도 한두 번 했고 아마 다른 집회에서도 했는데, 그때 분노했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국민 여러분은 전부 경제가 안 좋다, 힘들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중증치매환자 같은 넋두리입니까?'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나빠졌다, 어려워졌다, 특히 통계청 통계조차 그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제 문제없다.' 더군다나 '부동산가격도 문제없다.' 부동산가격은 폭등하고 있는데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작년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비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망언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연설회장에서 이런 비유를 했던 것, 정확히 말하면 '아니 중증치매환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표현을 했는데 이 중에서 중증치매환자만 골라 이번에 다시 문제 삼은 것입니다. '중증치매환자도 아니고'라는 표현

도 쓸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강력한 비유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반론을 하니까 또 과한 표현을 썼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입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민한 시기니까 이런 것조차 전부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표현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독재자 문재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흔히 쓰이는데 이것은 망언이라고 아무도 기사를 안 씁니다. 그런데 오히려 '독재자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많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는 독재적 행태이지요. 비유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감정과 국민의 평가와 국민의 상황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분노한 마음에서 나왔던 비유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시간 이후로 그런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김대영: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 후보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로 인한 '실패노트'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1년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나는 이것은 했다.' 내가 제일 중점을 두고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도 좋고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할 것

오세훈: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고 절실한 분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은 5년 동안 일을 하던 시절에 저는 세계 1등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미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서울시의 모든 변화, 바로 그러한 목표 덕분에 이루었던 변화들입니다. 물론 업

적은 굉장히 많이 쌓을 수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와 지켜봤던 서울시의 시정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고 챙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말을 계속 반문하게 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지금도 혹독한 한파 속에서, 한겨울에 식당가 뒷골목을 밤 11시쯤 걸어보면 그 시간에 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시장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달라질 것이 있다면 지난 5년 동안은 머리로 일을 했지만 이제 가슴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 절실한 분들을 업무시간 절반을 할애해 만나겠다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선거기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시장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달라집니다. 거기에 취임하자마자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전장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업종, 피해계층, 피해를 보신 시민께 역시 똑같은 돌봄의, 배려의, 지원의 행정이 가장 우선시될 것입니다.

사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출마 선언 당시만 해도 별로 지지율이 높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지지율이 계속 급하게 올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효과라든지, LH 사태로 인한 반사이익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진정한, 그러니까 여당을 심판하는 표가 아니라 오세훈 후보 본인의 표로 끌어오기 위한 복안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본인의 강점, 경쟁력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의 지지율을 믿지 않습니다. 지지율

은 며칠 만에 변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저를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이 많다면 그것은 지난 한두 달, 두세 달 동안 저의 행보와 단일화, LH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치인 오세훈의 정치적 궤적, 지난 10여 년 동안 정치를 일선에서, 현장에서 하지 못하던 시절에 제가 걸어왔던 궤적을 유심히 살펴본 그 판단의 결과도 분명히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를 통해 쌓았던 경륜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갈고 닦았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가지 않는 아프리카와 중남미까지 가서 시정 자문과 그 나라 시청에 자문하러 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선진국의 발전된 시스템을 보러 영국에도 가보고, 중국에도 가보고 또 국내에 들어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융합대학원이지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8학기, 9학기, 학기마다 '정책과 미래'라는 주제로 기술진흥과 경영진흥을 어떻게 융합시키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책을 냈고요, 강연을 했고요, 유튜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이고 쌓인 평가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높은 지지율은 기대치일 것이라 생각하고요.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곤두박질칠 수도 있는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조직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민주당은 관권선거, 금권선거, 흑색선전을 정말 유감없이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사회: 이제 토론회를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중계팀들도 고생하셨고요. 현장에서 지켜봐 주신 패널들, 그리고 취재기자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관훈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널